

2015

연구보고서-7

I S S U E P A P E R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 : 사업의 성과와 한국의 성평등 원조사업 확대 방안


수행과제명 •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 (V)
: 사업의 성과와 한국의 성평등 원조사업 확대 방안
과제책임자 • 김은경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 : 사업의 성과와 한국의 성평등 원조사업 확대 방안

수행과제명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 (V)
: 사업의 성과와 한국의 성평등 원조사업 확대 방안

과제책임자  김은경 연구위원

 Tel: 02-3156-7107

 e-mail: kekkekek@kwdimail.re.kr

요약

본 연구는 한국 공적개발원조 (ODA)의 젠더분야 사업의 증가 및 아태 지역 주요 협력대상국 4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여성정책 제도적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ODA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다차년도 연구사업임. 2015년 연구에서는 아태지역 협력국과의 연구 성과 및 성평등 정책 공유 및 확산 방안을 탐구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의 중장기 효과 점검 및 한국의 성평등 원조사업 추진 현황과 선진사례를 제시 하고 한국의 성평등 ODA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은경·장은하·김정수·곽서희·구영은(2015).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 (V): 사업의 성과와 한국의 성평등 원조사업 확대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배경 및 목적

- 2015년 9월 향후 15년간(2016-30) 글로벌 개발협력의 목표를 제시하는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가 공식 채택됨. 성평등 관련 주제는 MDG에서와 마찬가지로 독립 목표로 설정 됨.
- 한국정부도 2011년부터 시작된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Post-2015 의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보건과 교육 ODA 사업인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2016년에 공식 출범하여 성평등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갖기로 결정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2011년도부터 다차년도 연구사업인 “아태지역 양성평등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을 진행해 왔음. 본 연구는 아태지역 4개 협력국(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의 성평등 제고와 한국 ODA의 선진화를 그 목적으로 함. 2011년과 2012년에는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2013년과 2014년도에는 베트남과 미얀마를 추가하여 현재 5년차 총 4개국과 연구를 수행 중에 있음. 5차년도 연구는 세가지 목적 하에 진행됨. 첫째, 젠더 거버넌스의 개념을 분석하고 협력국의 젠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둘째, 지난 4년간의 다차년도 연구 사업을 종합·분석하여 협력국 현지에서 연구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성평등 원조수요를 파악하는 것임. 셋째, 한국의 성평등 원조사업 체계와 추진현황을 검토하는 것임. 이 세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협력국과의 성평등 원조수요를 연결하고, 향후 한국의 성평등 ODA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함.

2 젠더 거버넌스와 아태지역 협력국가의 현황

1) 성평등 달성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와 도전과제

- 건전한 정부(sound government)의 형성에 있어서 성평등은 결정적인 요소이며, 여성들이 공적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성평등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 그러나 여성의 공적 권한 강화에는 구조적, 법적, 사회적 장애요소가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전체가 대처하는 ‘전 정부적인 접근(a whole of government approach)’이 필요함.
- OECD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제한적이거나,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인식이 부족하거나, 성 평등 정책을 기획하거나 평가하는 기술이 부족할 경우, 성 평등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인식 하에 OECD는 회원국들이 채택할 수 있는 우수사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성 평등 증진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공부문과 정부에서의 여성 참여와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국가의 여성정책 전담 부처/기관 및 성 주류화 정책은 성 평등 사회의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자 정책이며, 여성 전담부처/기관을 중심으로 전 정부와의 젠더네트워크를 통해 부서 간 조정의 과정 역시 매우 필수적임. 이 같은 논의에 기반하여, 본 연구의 초점을 아시아 4개 국가의 여성 전담부처와 관련 부처 간 젠더네트워크에 두고 초청 워크숍 프로그램(SSAGE)을 구성하였으며, 각 국의 참가자들로부터 젠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음.

2) 아태지역 협력대상국의 젠더 거버넌스 현황과 전략

가. 인도네시아의 젠더 거버넌스 현황과 전략

- 인도네시아는 현재 ‘성 인지 예산 및 계획을 통한 성 주류화 촉진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성 인지 예산 및 계획을 통해 전 부처에 성 주류화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여성역량 강화·아동보호부(MoWECP)를 선두로 하여 국가개발청, 재무부, 자치부 등이 주무부처로서 협력하여 성 인지 예산 및 계획을 이행하고 있음. SSAGE 참석자들이 개발한 인도네시아 젠더 네트워크 전략으로서, 첫째, 전문가 팀 및 젠더영향평가센터의 구축, 둘째, 성 인지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셋째, 유관부처 및 지방정부의 성 인지 예산 및 계획 이행에 대한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지식경영, 넷째, 여성연구센터 및 NGO 역량강화를 통한 정책연구의 발전 등이 제시됨.

나. 베트남의 젠더 거버넌스 현황과 전략

- 베트남은 현재 노동보훈사회부(MOLISA)와 여러 중앙부처가 협력하여 성평등을 위한 책무성 증진 및 법률 제·개정 활동, 성평등 관련 국가전략 및 프로그램의 수립, 젠더와 성평등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성평등 법제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차원의 협력, 젠더와 성평등에 관한 데이터 및 통계 수집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부처 간 협동 메커니즘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 성평등에 대한 직원역량 부족, 성평등에 대한 자원부족 등은 도전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베트남 네트워크의 젠더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SSAGE 참석자들은 네 가지 행동전략을 개발하였는데, 첫째, 성평등 관련 부처 간 협력 메커니즘에 대한 규정의 개발 및 부처 간 협의회의 정례화, 둘째, 정부, NGO,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젠더네트워크의 구축, 셋째, 지도자/관리자의 성평등 역량강화, 넷째, 성평등의 이행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강화가 전략으로 제시됨.

다. 캄보디아의 젠더 거버넌스 현황과 전략

-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여성위원회(CNCW)가 범 부처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 관련 고위급 대화와 네트워킹을 주도하고, 캄보디아 여성부(MOWA)가 이를 이행,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캄보디아 여성부는 성평등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각 부처와는 성평등의 이행을 위한 성 주류화 행동그룹(GMAG)을 통해 주로 협력하고 있음. 캄보디아 내 부처 간 젠더 네트워킹과 협력 강화를 위해 제기된 향후과제로는, 첫째, 캄보디아 여성부의 모니터링, 기획, 예산, 프로그램 및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한 모든 정부 기관과의 접촉 확대, 둘째, 성 주류화에 대한 각 부처의 책임감 구축, 셋째, 분야별 기술작업반 및 ODA에서의 성 주류화가 제시되었음. 특별히, 향후 부처 간 젠더네트워크 발전 전략으로서, 젠더연구센터의 설립을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SSAGE 워크숍을 통해 개발되었음.

라. 미얀마의 젠더 거버넌스 현황과 전략

- 미얀마는 미얀마 국가여성위원회(MNCWA)가 여성의 발전을 위한 범 부처 기구로서 21개 정부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로 작동하고 있음. 그 외에도 미얀마여성연맹 등 다양한 여성정책 이슈별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음. 미얀마국가여성위원회의 주도 하에 18개 부처가 합동으로 ‘여성의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계획 2013-2022’을 수립한 바 있음. 그러나 미얀마의 젠더 네트워크 관련 도전과제 중 하나는 분절적인 직업훈련의 제공인데, 이러한 인식 하에, 미얀마 SSAGE 참석자들은 홍수가 난 지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 중심 직업훈련을 사회복지부, 농촌개발부, 직업기술교육부 간 협력을 통해 이행하고자 하는 행동계획을 발표하였음.

3 아태지역 협력국과의 연구성과 및 성평등 정책 발전 공유

1) 4개 협력국 성과확산 세미나

- 2015년의 주요 사업목적 중의 하나는 지난 4년간 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성평등 정책 현황 및 성평등 원조수요 연구 결과를 현지에서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임. 현지 성과확산 세미나는 2015년 4월부터 10월에 걸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현지 여성관련 부처가 공동주최하는 형태로 개최됨. 본 세미나는 본원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세션과 현지 부처 관계자들의 젠더 ODA 현황을 공유하는 세션으로 구성됨.
- 성과확산 세미나는 협력국 현지 성평등 정책 관련 부처 공무원, 국회의원, 현지 공여국 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본원의 연구결과를 확산하고 현지 정책의 현황과 정책제언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됨.

2) 아태지역 협력국과의 공동협력연구

- 2014년부터 본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4개 협력국과 공동협력연구를 진행하여 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각각 여성의 정치참여 그리고 여성의 경제참여 증진을 위한 주제로 진행됨. 캄보디아의 경우 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얀마의 경우 여성 보건 분야에 대한 주제로 2015년부터 새롭게 연구가 시작됨.
- 공동협력연구 수행 결과는 국가별 현황 및 한국의 아태지역 성평등 원조사업 확대방안 정책제언에 활용될 뿐 아니라 현지 성평등 정책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 증거에 기반(evidence-based)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활용될 예정임.

3) 아태지역 국제기구(UN Women)와의 공동협력연구

- 4개국 공동협력연구와는 별도로 본 사업에서는 UN Women 아태지역 사무소와 여성과 여아의 안전 관련 주제로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동협력연구를 수행함.
- 국제기구와의 연구협력 결과는 국가별 현황 및 한국의 아태지역 성평등 원조사업 확대방안 정책제언에 활용예정이며 아태지역 각국의 성평등 정책 관련 연구 및 정책기관에 배포하여 협력국의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이행의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함.

4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의 중장기 효과 점검

1) 모니터링 설문조사 분석의 목적과 방법

가. 목적

- 5차년도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워크숍 참석자 164명의 협력대상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정책전문가들에 대한 모니터링 설문조사를 통해 워크숍이 현지의 성 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에 대한 영향력을 조사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협력대상국을 이어주는 참가자들과 본원 간 네트워크의 지속성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방법

- 2013년도에 1차 협력대상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의 2011년도와 2012년도 워크숍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1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15년도에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4개 협력대상국(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워크숍 참석자 148명을 대상으로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2) 지표별 설문결과 분석

가. 지표 1: 개인 차원의 변화

- 2013년도 워크숍 참석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 평등과 여성 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5점 만점의 10개 문항에서, 워크숍 이전의 평균이, 4.036, 워크숍 이후의 평균이 4.346점으로, 평균적으로 0.309점 정도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 10개 문항 중에서 젠더에 관한 이해도(0.818), 젠더 관점에서의 업무인식(0.727), 젠더의 실제적 적용에 대한 어려움 인식(1.182), 참가자들 간 네트워크의 지속(1.091)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

나. 지표 2: 조직 차원의 변화

- 해당 지표와 관련해서는 조직차원에서의 여성정책 이슈화 및 관련 활동 여부에 대한 문항으로 측정됨. 전체 응답자 중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나타난 변화로, 젠더관련 사업을 추진했다는 응답이 39명(7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젠더 관련 교육훈련을 추진한 경우가 38명(75%), 젠더 관련 학습 혹은 토론회 추진 37명(73%), 젠더 업무 책임관 신설 혹은 확장 16명(31%) 순이었으며, 이러한 조직적 변화에 스스로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5명(88%)이었음.

다. 지표 3: 국가 차원의 변화

- 해당 지표는 국가차원에서 여성정책 이슈화 및 관련 활동 여부에

대한 문항으로 측정됨. 4개국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응답자의 국가에서 나타난 변화로 젠더 관련법 제정 및 개정을 꼽은 응답자가 25명(49%)으로 응답자 절반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젠더 관련 사업 추진이 22명(43%), 젠더 관련 부처 조직 개편이 18명(35%) 순이었음. 이러한 국가적 변화에 개인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7명(53%)으로 응답자 절반을 조금 넘었음.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의 네트워크 지속성 및 향후 협력방향

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방문

- 워크숍 이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혹은 국제개발협력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총 39명(77%)이었으며, 방문률 순으로 베트남 13명(100%, 무응답 1명), 미얀마 6명(100%), 인도네시아 10명(71%), 캄보디아 10명(59%)으로, 모든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홈페이지 방문률을 보였으며, 특히 베트남과 미얀마 참가자 전원이 홈페이지를 방문했음.

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기여할 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현지의 여성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데 어떠한 활동이 가장 기여가 클지에 대한 질문을 주고, ① 워크숍 등의 훈련 프로그램, ② 고위급 정책결정자 협의체를 통한 ODA 의제 개발, ③ 여성발전 경험의 공유, ④ 현지 여성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학술 활동, ⑤ 여성정책 분야 ODA 사업제안서 개발이라는 5개 선택지(중복응답 가능)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가장 많은 응답자가 ‘워크숍 등의 훈련프로그램(26명 응답, 약 51%)’을 답하였고, ‘고위급 정책결정자 협의체를 통한 ODA 의제 개발(20명, 약 39%)’, ‘여성발전경험의 공유(20명, 약 39%)’, 여성정책 분야 ODA 사업제안서 개발(19

명, 약 37%), ‘현지 여성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학술활동(15명, 약 29%)’ 순으로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었음.

5 한국의 성평등 원조사업 추진현황과 선진사례

1) 한국 정부의 성평등 원조 방향과 선진 양자기구

가. 한국 ODA 기본정책과 성평등 이슈

- 한국은 2010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1-2015)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과 정책이 수립됨. 또한 한국 정부는 한국의 국가별로 맞춤형 ODA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협력대상국에 대한 유·무상 통합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수립하고 있음.
- 국무조정실은 평가소위의 2014년도 수탁과제를 바탕으로, 지난 8월 ‘ODA 사업의 성 인지적 관점 적용 지침’을 ODA 사업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여 한국 ODA가 좀 더 성 평 등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하여 배포.

나. 선진 양자기구의 성평등 원조 정책과 전략

- 본 연구의 협력대상국가에서 성평등 원조를 활발히 하는 국가는 호주,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이 있음. 이 가운데 최근 성평등 원조를 GNI 대비 0.7%를 달성한 영국과 최근 젠더와 개발 전략을 정비한 바 있는 프랑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영국의 성인지 원조는 최근 십여 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젠더 마커에 의해 검토된 원조 중 56%가 성 평등으로 지원 된 바

있음. 영국은 2014년 개정된 국제개발(성평등)기본법을 근간으로, 영국 ODA 집행기관인 국제개발부(DFID)의 2011-15 중장기 정책을 살펴보면 DFID의 원조의 목적을 기회의 불균형 감소에 두고 개발이 영국의 경제, 안보 및 미래에 미칠 이로운 영향을 강조하여 영국 개발 원조의 정당성을 역설하면서 이와 동시에 납세자들을 위한 개발 원조의 결과, 투명성, 책임의 중요성 및 여성, 보건, 민간과의 협력, 다자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등에 대한 이슈가 강조되고 있음.

- 프랑스의 성평등 원조 비중은 2012년 현재 23%로, 영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나, 한국의 비율이 7%임을 상기하면, 프랑스의 사례도 도움이 됨. 프랑스의 국제개발 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는 평등으로, 프랑스는 ‘젠더와 개발전략 2013-2017에서 프랑스의 성평등 증진의 우선순위를 정의하고 개발파트너/수혜국의 활동 지침을 밝히고 있음. 프랑스는 성평등을 양자/다자 등의 대화에서 주요 요소로 설정하고 있으며, 사회적 변화의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기 위해 다차원적으로 성 주류화 도구를 통합하는 활동을 취하고 있음.

2) 한국정부와 선진양자 기구의 성평등 원조 사업의 사례

가. 한국 KOICA의 성 주류화 사업 사례

- 정부차원의 성평등 원조는 무상원조의 대표기관인 KOICA에서 주로 수행해왔으며, 2014년 현재 성 주류화 시범사업(프로젝트)이 31건, 여성역량강화 연수사업이 10건, 여성대상 국제기구협력사업이 7건, 민관협력사업이 20건으로 수행되고 있음. KOICA의 대표적인 성 주류화 시범사업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브니시나 병원 병동신축 및 ICU 설립사업’, KOICA 라오스 ‘우돔싸이주 싸이군 상수도 공급사업’ 그리고 동티모르 ‘베코라 기술고등학교 지원사업’이 있음.
-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는 부처의 ‘새일센터’ 사업을 국제개발사업으로 발굴하여 베트남여성경제역량강화 지원사업을 2011년에 시작하

여 고유사업화 하였으며, 2013년에는 캄보디아 인신매매 피해여성 지원 사업을 시작함.

나. 선진양자기구의 사례

- 4개 협력대상국(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을 대상으로 성평등 분야에서 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주요 선진 양자기구의 사업을 몇 가지 소개함. 네 사례는 호주의 對 인도네시아 ‘서부자바 수마트라 학교 재건 프로그램’ 사업 사례, 프랑스의 對 베트남 ‘AFD의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라인 3 건설’ 사업 사례, 독일의 對 캄보디아 ‘BMZ의 사회건강보험’ 사업 사례, 영국의 對 미얀마 ‘태풍 나르기스 이후의 모성 및 아동보건’ 사업사례를 대표적으로 소개함.

다. 한국 개발NGO의 성평등 원조 현황

- 이 보고서에서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소속단체 117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각 단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사업에 여성대상 사업 또는 성 주류화 사업 유무를 조사함. 또한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비전 또는 주력사업분야로 여성/성평등을 언급하고 있는지 유무에 따라 소속 단체에 대해 Group 1, 2, 2 으로 유형화를 추출함.
- Group 1에 속한 단체는 모두 9개로, 이들 단체는 KCOC 소속 단체 중 설립목적이나 주력사업에 여성/성평등을 하나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KCOC 조사대상 단체의 약 7.6%에 해당함. 이에 속하는 기관은, 국제아동돕기연합, 굿네이버스, 글로벌투게더, 아프리카 어린이돕는모임, 엔젤스헤이븐, 태화복지재단, 한국국제봉사기구, 한국카리타스인터네셔널, 서울국제친선협회임.
- Group 2에 속한 단체는 모두 20개로, 이들 단체는 설립목적이나 주력사업으로 여성/성평등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성대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임. 이들 기관은 국경없는 교육사회, 세이브더

칠드런코리아, 지구촌나눔운동, 한국월드비전 등이며, 이 가운데는 KOICA와의 민관협력사업으로 여성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사례도 있었음.

- Group 3에 속한 단체는 모두 20개로, 이들 단체는 설립목적이나 주력 사업으로 여성/성평등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 사업에 여성이나 성평등 요소를 포함한 성 주류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 로터스월드, 메디피스, 코피온,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이 있음.

6 결론 및 정책제언

1) 4개국 젠더 거버넌스의 특징 성 주류화 도구의 제도화 시급

- 젠더 거버넌스, 성 주류화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4개 협력대상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젠더 거버넌스 구조를 비교·분석하였음. OECD(2014)의 성 주류화의 제도적 구조에 대해 살펴본 것을 적용해봤을 때, 4개국은 모두 성 주류화나 성평등 정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할 기본적인 법제는 갖추고 있었음. 하지만, 가장 실제적으로 성 주류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성 주류화의 도구(성별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 성별분리통계자료 구축)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의 경우만 성별영향평가와 성 인지예산 제도를 구축하고 있어, 젠더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 나머지 국가들의 성 주류화 도구의 제도화가 시급함.
- 또한, 4개 협력대상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성평등 정책문서 및 계획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여성문제 전담부처를 갖추고, 부처 간 성평등 이슈와 관련된 조정을 위한 노력과 시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젠더이슈를 이끌어 나갈 여성 정책 전담 부처의 범 부처차원의 조정권한 부족과 성평등 전문성/역량과 재원 부족 등이 도전과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 4개국과의 연구협력을 통한 성평등 원조수요

- 성과확산 세미나의 협력국 현지 개최는 다수의 현지 관계부처 공무원 참여를 가능케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연구성과 확산이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며 본 연구결과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 현지 고위급의 관심과 의지를 독려할 수 있었음. 세미나 참석자들에 의하면, 협력국의 여성정책이 당면한 문제들을 KWDI와 같은 제3자 연구기관이 지적해 준 것은 관계부처 공무원에게 보다 설득력있게 작용하였고, 현지 여성부처에 힘을 실어 주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었음.
- 2015년의 공동협력연구를 통해서도 협력국의 연구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첫째,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강화에 대한 지원, 둘째, 통계 등의 기초연구 강화에 대한 지원, 셋째, 분석에 기반한 정책 시사점 도출 훈련 등의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5차 년도의 성평등 원조수요 파악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제시되었던 구체적인 분야보다는 협력국의 성평등 정책 개선, 역량강화, 교육 훈련, 한국의 경험 공유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젠더 거버넌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성평등 원조수요가 다수 확인됨.

3) 정책제언

가. 국무조정실

- 제2차 ODA 기본계획은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음. 첫째, 개발효과성을 정책의 기본계획으로 내재화 시키지 못하고 있고, 둘째, 범분야 이슈로서 젠더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았으며, 셋째,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에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이와 같은 한계 극복을 위해 본 연구는 시행기관의 ‘기관별 시행계획안’ 수립, 주관기관의 ‘분야별 시행계획안’ 수립 과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연간 종합시행계획’ 수립과정에 여성가족부의 검토를 거치어 성별영향분석을 시행하는 방안과 ODA 부관부처에 젠더 전문가가 상주 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부처 국장급 협의체를 비롯한 기관 간 협업체계에 여성가족부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함.

-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처음 발간한 ‘ODA의 성 인지 관점 적용 지침’은 그 자체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유무상 원조시행계획서에 들어간 젠더를 고려한 요소들이 모두 ‘선택사항’으로 되어있어 실질적인 활용의 측면에서 강제력이 거의 없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음. 또한 성 인지 관점 적용 지침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성 인지 관점에서의 평가와 이에 기반한 보고체계가 갖추어 져야 함. 한국의 경우 정책의 수립만 있고, 이에 대한 이행이나 모니터링, 평가 같은 환류의 과정은 부재한 상황으로 성 인지 관점 적용 지침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선택사항이 필수사항이 되어야 하며, 성 인지 관점에서의 평가와 이에 기반한 보고체계가 갖추어져야 함.

나. 유무상 원조 시행기관

- KOICA는 직제상 여성/성평등 이슈를 담당하는 업무를 공식화하고 젠더 전문관 제도를 두고 있는 반면, EDCF는 성평등 이슈를 담당하는 공식적인 직제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임. 현재 양대 기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여성/성평등 이슈가 범분야 이슈이며, 개발 원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이슈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임. 또한 EDCF-KOICA간 협의체 운영 시, 여성가족부를 전문가 자격으로 포함하여 실질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ODA 사업에 성 주류화를 이루기 위한 효율적 방안이 될 것임.

다. 여성가족부

- 현재 개도국은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차원의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췄으나, 실용적인 성 주류화 도구들이 제도화 되지 않고 있음. 개도국의 한국정부에 대한 성평등 원조수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 경우, 경제 및 공공정책에 여성참여 확대 위한 역량강화, 캄보디아의 경우 젠더연구센터 설립에 관한 자문과 역량강화, 미얀마의 경우 여성폭력관련 정책과 여성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효율성 운영 등이 국가별 성평등 원조수요로 제안됨. 4개국 협력대상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공통적인 수요로는 여성정책 발전경험에 대한 지식공유, 성별통계 구축, 통계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폭력분야 통계지수와 데이터 구축 등 성 인지 통계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가 제기되고 있음. 성별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제도, 성별 분리통계와 같은 정책들은 국내 다른 부처나 기관에서 수행할 수 없는 내용들로서, 향후 여성가족부가 이 분야에 대해 컨설팅이나 역량강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향후 과제

- 현지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 본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 중 가장 높은 기대를 받는 것은 워크숍 등의 훈련프로그램의 제공이며, 이는 실제 현지의 정책전문가들로부터 현지 여성정책 인프라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음. 따라서 향후에도 SSAGE 워크숍을 심화·강화해 나감으로써 현지의 여성정책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다만, 국가별로 KWDI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가별로 상이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
- 본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협력대상국 정책전문가들과의 공유를 위한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발전경험에 대한 사례연구가 구축되어 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22편의 사례연구가 구축되었음. 주요 분야는

성 주류화의 제도화라 할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와 성별분리통계, 성 주류화의 조직적 차원의 기관 인프라, 조직원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정치, 경제분야의 역량강화와 지원정책, 여성·여아에 대한 폭력방지를 위한 지원정책, 성차별적 제도개선, 취약 계층 여성에 대한 정책지원, 여아 및 여대생의 교육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최근의 일·가정양립 지원정책까지 포괄함. 따라서 2016년도에는 그동안 축적해온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국가별 수요에 맞춘, 보다 심화된 형태의 주제별 SSAGE 워크숍 및 정책컨설팅을 수행·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 외교부 개발협력국,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실
